

STRATEGY 21

통권40호 Vol. 19, No. 2, Winter 2016

일본의 新 해양전략과 해상전력 발전 동향 분석*

-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배 준 형**

I. 서론

II. 일본의 해양전략 기초와 해군력 증강 개관

III.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하고 일본의 新 해양전략 구상

IV. 일본의 해상전력 발전 동향 분석

V. 결론

* 본 논문은 제7회 해양학술 논문공모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것임.

** 해군소령(해사58기), 해군작전사 8전투훈련단.

I. 서론

2013년 일본정부는 이례적으로 일본 안보정책의 3대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 「신방위계획대강(新防衛計画大綱)」, 「신중기방위력 정비계획(新中期防衛力整備計画)」을 동시에 채택하였다.¹⁾ 특히 1957년에 책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을 반세기만에 개정하여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으며, 2010년에 개정된 「방위대강」을 불과 3년 만에 다시 개정하였다. 또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방위대강의 개정과 맞추어 2010년 이후 3년 만에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위력 정비계획과 방위예산을 책정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이 자국의 안보전략 및 정책을 규정하는 3가지 핵심 가이드라인을 전례 없이 동시에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급변하는 지역안보 정세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군사력 강화를 가속화하려는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적극적인 행보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위협인식과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해양진출, 그리고 도서 영유권 및 해양자원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센카쿠 열도(尖角諸島, 중국명 дя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해당 해역에 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신형 전력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응능력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역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전략의 구상과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은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을 개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오로지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집단적

1) 「국가안전보장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로, 일본의 각종 국방·군사전략 및 정책의 기본지침이 되는 최상위 문서이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 안보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육·해·공 자위대의 운용목표 및 전력증강 방향을 제시한 문서로, 1976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후 총 3회(1995년, 2004년, 2010년)에 걸쳐 개정되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대강에서 제시된 방위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구체적인 전력증강 계획과 소요 예산을 5개년 범위로 제시하는 문서이다.

자위권의 행사를 통해 자국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 영토의 방위를 넘어 해외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디서든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²⁾ 또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토대로 미국과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일본 유사시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공동방위를 명시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은 1997년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이후 20여 년 만인 2015년에 이를 다시 개정하여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에 제한을 없앴다.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범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자위대는 지리적·공간적 제한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군과 공동으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³⁾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이 향후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일본의 해군력, 즉 해상자위대 전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전력 강화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맞물려 외부에 대한 힘의 투사능력이 강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안보 질서 및 우리 해양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일본이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안보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해상자위대의 역할과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의 새로운 해양전략과 이에 따른 해상자위대의 전력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해양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와 연계하여 냉전기 및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건설 과정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⁴⁾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냉전기 소련의 위협과 미일동

2) 한국국제문제연구원 편, “일본 집단자위권 : 해외 무력행사 가능,” 『국제문제』 제542호(2015년 10월), pp.8-9.

3) 日本防衛省, “新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ガイドライン)(2015年4月27日)”
http://www.mod.go.jp/j/pu_blication/kohoshiryo/pamphlet/pdf/shishin.pdf

4) 송영선,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 : 추세와 전망,” 이홍표 편, 『일본의 해양전략과 21세기 동북아 안보』(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이춘근, “일본 해군력 발전의 역사적 궤적,” 이홍균 편, 『日本の 해양전략과 21세기 동북아 안보』(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서울: 나남출판, 2006년); 이홍표, “21세기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 추세와 전망,” 『STRATEGY 21』 Vol. 21, No.1(2008 Summer); 김태준,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

맹의 틀 안에서 형성된 일본의 해양전략 기조와 이에 따른 해군력 건설 과정을 살펴보고, 탈냉전기 국제질서 및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발전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행연구 이후에, 최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동향을 분석한 후속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일본 해군력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 이는 일본 해양전략의 변화 동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새로운 해양전략과 연계하여 해상자위대 전력의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화 또는 발전되고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⁵⁾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분석범위를 달리하여, 최근 2010년대에 들어 일본 정부가 표명한 새로운 해양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해양전략의 변화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전력 발전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제2장에서 냉전기부터 탈냉전기를 거쳐 200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형성 및 변화되어 온 일본 해양전략의 기조와 해군력 증강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최근 지역안보환경 변화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새로운 해양전략 구상을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새로운 해양전략의 구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해상전력 발전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에서 이러한 일본의 동향이 우리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할 것이다.

II. 일본의 해양전략 기조와 해군력 증강 개관

1. 냉전기 해양전략과 기반적 방위력의 구축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해 육·해군을 해체하고 모든 무장을 해제하였다. 하지만 미소 간의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미

력분석,” 『STRATEGY 21』 Vol.4, No.1(2001 Summer) ; 한준희·이정근, “일본의 방위정책 및 해상자위대 전력변화와 한국 해군의 발전방향,” 『해양전략』 제164호(2014년 12월)

5) 박남태, “일본의 해양전략-제국해군에서 해상자위대로,” 임경한 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경쟁과 협력의 딜레마』(서울: 북코리아, 2015) ; 김기주, “일본의 해양전략 평가와 전망,”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국의 승인하에 1954년에 육·해·공 자위대를 창설하고 재무장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1957년에는 「국방의 기본방침」을 채택하여 미·일 안보체제를 일본 방위의 근간으로 규정하고, 자위(自衛)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가는 것을 방위정책의 기조로 하였다.⁶⁾

이를 위해 일본은 1958년부터 1976년까지 총 4차에 걸쳐 해상방위력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먼저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1958~1960년)」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공여 및 대여의 형태로 호위함 및 잠수함 등 함정 33척과 대잠초계기 P2V-7 4기 등을 확보하였다. 「제2차 방위력 정비계획(1962~1966년)」에서는 국지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구축을 목표로 하여 헬기탑재 호위함(DDH) 등 총 30척의 호위함과 60여 기의 항공기를 증강하였다. 이어서 「제3차 방위력 정비계획(1967~1971년)」에서는 주변해역 방어능력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호위함 13척, 잠수함 4척 등 함정 45척과 항공기 120여 기의 증강이 이루어졌다. 이후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1972~1976년)」에서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과 닛슨 독트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아시아 배치 전력의 감축 등으로 인해 해상전력의 증강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해상교통로 방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잠전 능력이 강화된 호위함 등 함정 37척과 항공기 110여 기의 증강이 이루어졌다.⁷⁾

일본은 총 4차에 걸친 「방위력 정비계획」의 추진을 통해 기본적인 해상방위력을 구축한 이후, 1976년에 「방위계획대강(大綱)」을 발표하여 이후의 방위력 건설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독립국가로서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기반적 방위력」의 구축을 표명하였다.⁸⁾ 또한 자위대의 역할은 자국 방위에 국한하여 소규모의 제한적인 침략에 대해서만 방위하며, 대규모의 침략에 대

6) 日本防衛省, “国防の基本方針(昭和32年5月20日),” <http://www.mod.go.jp/j/publication/wp/wp2013/pc/2013/html/ns006000.html>(검색일:2016년 7월 21일)

7) 朝雲新聞社 編, 『防衛ハンドブック(平成20年版)』(東京:朝雲新聞社, 2008年), pp.74-79.; 真田尚剛, “新防衛力整備計画の再考—策定過程における防衛力整備の方向性を中心に,” 『国際安全保障』第42巻第1号(2014年 6月), pp.84-86.

8) 「기반적 방위력」은 후방지원체제를 포함한 국가방위에 필요한 제반 기능을 갖추고, 평시에 충분한 경제체제를 확립하여 한정적이고 소규모의 침략에 대해서 자력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위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수준의 방위력을 의미한다. 1976년에 발표된 방위계획대강에 의하면, 일본의 전략적 목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본토침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었다. 비록 미일안보체제가 일본 방위의 핵심적 근간을 이루고 있었지만, 일본은 자체 방위력으로 본토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방위력의 건설을 기본 목표로 정하였다. 栗田昌之, 『基盤的防衛力構想の策定とその意義：1970年代の防衛行政における政策と戦略』, 法政大学公共政策研究科論文(2016年), pp.12-13.

해서는 미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자위대는 후방지원을 하는 역할분담체제를 정립하였다. 이와 같은 방위정책의 기초 아래, 당시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상자위대가 동맹국인 미 해군과 연합하여 동아시아 해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일본 주변해역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여 일본 본토에 대한 해상으로부터의 침략을 차단 및 억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구소련의 대외팽창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에 근거한 전략적 역할로서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 및 「3해협 봉쇄」를 표명하였다. 1981년 등장한 미국의 레이건 정권은 극동에서 소련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할분담을 일본에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미국의 대일 방위요청 구상이 구체적으로 일본의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 및 3해협 봉쇄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83년 1월 미국을 방문한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총리는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일본의 전략적 역할로서, 소련의 백파이어 폭격기의 침입을 상시 경계·감시 및 대응하기 위해 일본열도를 불침항모화(不沈航空母艦)하고, 일본열도의 3대 해협(소야(宗谷), 쓰가루(津軽), 쓰시마(対馬)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여 소련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 및 수상함의 활동을 저지하며, 도쿄와 괌, 오사카와 대만해협을 잇는 1,000해리 해상교통로의 방위를 명백히 하였다.⁹⁾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의 골자는 일본열도 주변의 해상교통로를 일본이 자력으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미군의 지원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특히, 유사시 위협의 원천인 극동 소련군의 해·공군기지를 미 해군이 공격하고, 해상자위대는 미 항모전단을 호위 및 지원하며, 동시에 소련 해군의 3해협 통과를 저지 및 봉쇄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은 대잠전 능력 강화와 해상 방공체제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1980년대 중반부터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다.¹⁰⁾

먼저 일본은 「중기업무견적(1983~1987년)」을 통해 해상자위대의 유도탄 호위함 3척, 잠수함 6척 등 합정 50여 척과 대잠초계기(P-3C) 50여 기 등 항공기 150여 기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잠헬기 3기를 탑재할 수

9) Euan Graham, 『Japan's Sea Lane Security, 1940-2004』(New York: ROUTLEDGE, 2006), pp.143-147.

10) 배정호, “일본의 안보전략과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 『21세기 해양갈등과 한국의 해양전략』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년), pp.240-255.

있는 시라네급 DDH를 4척 건조하고 대잠헬기를 대량 확보함으로써, 호위대군(護衛隊群)의 8함 8기 체제(이른바, 8·8함대)를 완성하였다.¹¹⁾ 또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1986~1990년)」을 통하여 대잠전 능력 및 해상방공능력의 강화를 위해 5년간 호위함 9척, 잠수함 5척, P-3C 46기, 대잠헬기 65기를 확충하는 등 해상자위대 전력의 질적·양적 증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P-3C 100기 체제를 완성하여 대잠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해상방공능력의 구축을 위해 이지스 호위함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해상교통로 방위에 있어서, 항공모함 전력을 보유할 수 없는 해상자위대가 원해에서 함대나 선단을 대공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당시 큰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일본 본토에서 1,000해리까지 떨어진 원거리 해역에는 항공자위대 전력이 대공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000해리에 달하는 원해에서 해상교통로를 방위하는 함정을 대공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체계로서 이지스 호위함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근고급 이지스함 4척을 확보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지스함 보유국이 되었으며, 또한 모든 호위함에 함대공유도탄과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를 탑재하여 자함(自艦) 방공능력을 강화하였다.¹²⁾

2. 탈냉전기 해양전략의 변화와 해군력 증강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안보환경 및 일본을 둘러싼 지역안보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일본의 안보정책 및 전략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0년 걸프전의 발발이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으로부터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구받았으나, 해외파병을 금지한

11) 8함 8기 체제(8·8함대)는 대잠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1개 호위대군을 8척의 호위함과 8기의 대잠헬기로 구성한 것을 지칭한다. 즉 1개 호위대군을 대잠헬기 3기를 탑재하는 헬기호위함(DDH) 1척, 유도탄호위함(DDG) 2척, 대잠헬기 1기를 탑재하는 호위함(DD) 5척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호위대군의 8함 8기 체제는 20세기 초 구 일본 해군이 신형 전함 8척과 순양함 8척으로 구성된 주력 함대를 확보하려고 한 당대의 8·8함대 건설 계획에 견주어져 8·8함대로 불려지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8함 8기로 구성된 호위대군을 총 4개 보유하고 있다. 류재학·배준형,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키워드 이해하는 세계 최정상 해군력, 해상자위대의 실제』(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년), pp.170-175.

12) Euan Graham(2006), pp.174-180.

일본 헌법상의 제약으로 참전하지 못하고, 130억불에 달하는 금액만을 연합국 측의 전쟁비용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국제사회의 호의적인 평가와는 달리, 일본은 안보무임승차(free-ride) 및 수표외교의(check diplomacy) 당사국으로 지칭되어 큰 비난과 혹평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국의 경제력과 이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의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¹³⁾

1995년, 일본은 1976년 이후 19년 만에 「1996년 이후의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질적 증강과 일본 주변지역의 안정을 위한 미일동맹 체제의 강화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전략 구상을 바탕으로 일본은 1996년 클린턴(Clinton) 대통령과 하시모토(橋本) 수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안정보장에 관한 공동선언 : 21세기를 향한 동맹」을 발표하고 미·일의 군사적 협력범위를 극동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였다.¹⁴⁾ 또한 이를 위해 1997년에는 일본 자체 방위에 중점을 두었던 「미·일 방위협력지침(U.S.-Japan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을 주변지역 급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지역 사태를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미·일 양국이 기존의 소련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중국의 위협, 한반도 및 대만에서의 사태 발생 시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하며, 동시에 아태 지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미일 연합작전의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등을 제정하여 자위대의 임무를 다양화하고 활동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였다.¹⁵⁾

일본은 이러한 탈냉전기 방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주로 해상자위대의 기능과 능력을 강화하였다. 해상방위의 초점을 종전의 소련에 대한 경계·감시 및 봉쇄에서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의 안전 확보로 조정하면서 원해작전 능력 및 대규모 해상수송 능력의 확보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곤고급 이

13) 五百旗頭真 編, 『戦後日本外交史』(東京: 有斐閣アルマ, 1999年), pp.228-230.

14) 日本外務省, “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ての同盟(1996年4月17日),” <http://www.mofa.go.jp/mofaj/area/usa/hosho/sengen.html>(검색일:2016년 7월 12일).

15) 日本外務省,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1997年9月23日),” <http://www.mofa.go.jp/mofaj/area/usa/hosho/kyoryoku.html>(검색일:2016년 7월 12일).

지스함 2척을 추가 건조하여 이지스 호위함 4척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원해에서의 해상방공능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4,600톤급 호위함 7척 및 2,900톤급 잠수함을 5척, 8,900톤급의 오오스미급 대형 수송함을 건조하여 작전반경을 확대하고 대규모 해상수송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¹⁶⁾

3. 9·11 테러 이후의 변화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9·11 테러라 할 수 있다. 9·11 테러에 의해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이 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일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9·11 테러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대테러전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을 위해 해외 분쟁지역에서 자위대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2001년 10월 「테러대책특별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및 수송함으로 구성된 지원부대를 인도양으로 파견하여 다국적군에 대한 해상급유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는 비록 비전투적인 후방지원 임무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이는 일본이 대테러작전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지역 범위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⁷⁾

이러한 정세변화에 따라 일본은 안보전략을 재검토하여 2004년 12월에 「2005년 이후의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였다.¹⁸⁾ 이를 통해 일본은 향후의 방위전략을 단순한 자국방어나 지역안보 개념을 넘어, 미일동맹의 기능적 범위를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즉응성, 기동성에 입각한 「다기능·탄력적 방위력」의 정비를 표명하였다. 즉, 기존의 억지 중심의 방위전략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다기능적·탄력적인 방위력

16) 日本防衛庁, “平成8年版防衛白書—新たな時代への対応,”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6/index.html (검색일: 2016년 7월 14일).

17) 『東アジア戦略概観2002』(東京: 日本防衛庁防衛研究所, 2003년3월), pp.267-267.

18) 日本防衛省, “平成17年度以降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04년12월10일),”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05/taikou.html> (검색일: 2016년 7월 18일).

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었다.¹⁹⁾

이어서 발표된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2009년)」에서는 재래식 전력의 감축과 함께,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였다. ① 탄도미사일 공격에의 대응, ② 적의 특수부대 및 게릴라 요원에 의한 공격에의 대응, ③ 일본 부속도서에 대한 침략에의 대응, ④ 주변해역과 영공의 경계·감시 및 무장 공작선에의 대응, ⑤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그리고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전력의 확보를 표명하였다.²⁰⁾ 이를 위해 먼저, 해상자위대의 주력부대인 호위함대의 편성과 지휘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임무의 다양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하였다.²¹⁾ 또한 주요전력인 호위함대, 잠수함대 및 소해부대 전력의 질적 증강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13,500톤급의 휴가급 호위함(DDH) 2척 및 7,700톤급의 아타고급 이지스 호위함(DDG) 2척을 새롭게 건조하고, 기존 곤고급 이지스함 4척의 Mk41 수직발사대를 개조하고 SM-3 Block IA 요격미사일을 탑재하여 탄도미사일 방어능력(BMD)을 부여하였다. 또한 신형 잠수함 및 기존의 P-3C를 대체할 신형 대잠초계기 P-1의 도입을 추진하고, 개량형 대잠헬기(SH-60K) 및 신형 소해헬기(MCH-101)를 대폭 증강하였다.

19) “다기능”의 의미는 자위대가 일본방위, 대규모 재해 구조·구난, 미일협력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임무와 기능에 부합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며, “탄력적”의 의미는 적응성, 기동성, 유연성 및 다목적성을 가진 방위력을 건설해 나간다는 것으로, 장비 및 인력 운용 측면에서 효율화 및 합리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20) 日本防衛省,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17年度~平成21年度)について(2004년12月10日),” [http:// 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05/chuuki.html](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05/chuuki.html) (검색일: 2016년 7월 18일).

21) 호위함대 개편의 주요내용은 먼저, 호위함대 예하의 4개 호위대군을 각각 2개 호위대로 구성하고, 각 호위대는 4척의 호위함으로 편성하였다. 각 호위대는 DDH 1척, DDG 1척, DD 2척으로 구성되는 DDH 그룹의 호위대(대잠전 증시형 그룹)와, DDG 1척과 DD 3척으로 구성되는 DDG 그룹의 호위대(함대방공 증시형 그룹)으로 재편성하여 임무에 따라 효과적으로 전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각 호위함의 모함을 변경하지 않되, 소속 호위대만을 재편성함으로써 같은 호위대 소속의 호위함들이 수리→교육훈련→작전임무의 운용주기가 일치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휘구조의 개편을 통해 호위함대사령관은 오로지 「Force Provider(전력 관리 책임자)」로서 호위함대 전력의 전투력을 유지·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유사시 호위함대 전력의 운용 및 전투지휘는 「Force User(사태 대처 책임자)」로서 자위함대사령관 또는 각 지방총감이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山崎眞, “海上自衛隊自衛艦隊の大改編,” 『世界の艦船』(東京: 2008년6월), pp.79-81.

Ⅲ.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하고 일본의 新 해양전략 구상

1. 중국의 해군력 증강 및 A2/AD와 일본의 위협인식

2000년대 들어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도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이었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30여 년간 연평균 10%대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지속하였고,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국가로 불리며 21세기 국제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경제력 신장에 부합한 군사력의 증강을 추구하고,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 확보와 동·남중국해에서 영향력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 류화칭(劉華清) 제독이 제시한 해양전략 개념에 따라 2020년까지 서태평양 진출을 위해 항모전투단 건설과 SLBM 사거리 연장 등을 목표로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²²⁾ 또한 기존의 호위함, 구축함 등 주요 해상 전력들을 더욱 첨단화·대형화하고, 핵잠수함, 대함탄도유도탄 및 대함순항유도탄 등 강력한 공격적 방어전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²³⁾

이와 같이 해군력 증강을 바탕으로 서태평양에 대한 해양통제권 장악을 추구하는 중국의 해양전략에 대해 미국은 이를 A2/AD(Anti-Access, Area Denial :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으로 규정하고, 그 목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군의 현시(presence)와 개입을 저지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²⁴⁾ 즉,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이 미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22) 류화칭 제독은 1980년대 해군사령원으로 재직하며 중국해군의 현대화에 필요한 전략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류화칭 제독이 주창한 단계별 해양전략 발전 및 해군력 건설의 핵심은 우선 2000년까지 일본, 필리핀, 남중국해 해역을 포함하는 제1도련 내 해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2020년까지 제2도련인 괌을 포함한 마리아나 제도까지 진출하여 중국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원해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 중국해군이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오순근, “중국의 해양전략-대륙국가에서 해양강국으로,” 임경한 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경쟁과 협력의 딜레마』(서울: 북코리아, 2015.), pp.135-141.

23) 위의 글, p.169.

24)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February 2010),”

을 구축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평시 미군의 전력 현시는 물론, 위기의 개입 및 전시의 전쟁수행 의도를 약화 또는 상실시켜, 미국과 직접 대규모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구축하고 중국의 지역적 우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및 미 본토로부터 증원되는 미군 전력을 중국 본토로부터 최대한 멀리 이격된 해역에서 격퇴 또는 저지할 수 있는 원해 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A2/AD 전략을 수행하는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분명히 하고, 동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²⁵⁾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A2/AD 능력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면서 미국은 이에 따른 취약성을 극복하고, 기존의 군사적인 우위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서 「공해전투(ASB : Air-Sea Battle)」를 구상하였다.²⁶⁾ 공해전투는 전방 지역으로 전개된 공군력과 해군력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전쟁 발발 초기에 적의 저항 능력을 무력화시켜 장차 지상군의 작전 투입이 용이한 상황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²⁷⁾ 이는 유사시 미국의 해·공군 통합전력을 중국의 도련선 내로 투사하여 대함탄도미사일과 대지순항미사일 등 중국의 A2/AD를 실행할 전력들을 조기에 무력화시킨다는 공세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공해전투 전략의 구현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동맹국 및 안보협력국과 적극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²⁸⁾

한편,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적극적인 해양패권 추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강경한 대외정책은 일본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²⁹⁾ 일

pp.31-32. http://www.defense.gov/Portals/1/features/defenseReviews/QDR/QDR_as_of_29_JAN10_1600.pdf(검색일:2016년 7월 17일).

25)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pp.4~9. http://archive.defense.gov/pubs/2014_Quadrennial_Defense_Review.pdf

26) 미국은 공해전투 개념의 구체적 적용 대상으로 중국만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일반적 의미의 접근 저지능력과 지역거부능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공해전투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A2/AD에 대한 맞춤형 전투개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삼만,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발전,"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90.

27) Air-Sea Battle Office, "Air-Sea Battle: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 Area Denial Challenges," <http://defense.gov/pubs/ASB-ConceptImplementation-Summary-May-2013.pdf>(검색일:2016년 7월 20일).

28) 임경한, "미국의 해양전략: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임경한 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경쟁과 협력의 딜레마』(서울: 북코리아, 2015.), p.68.

29) 日本防衛省, 『平成26年版防衛白書』(東京: 防衛省, 2014), pp.40-43.

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이다오) 영유권, 동중국해의 대륙붕 및 해양자원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와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자국의 해양주권 및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동·남중국해가 베이징의 호수가 되지 않도록 해양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대중국 해양전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⁰⁾ 또한 일본은 중국의 힘의 의한 현상변경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중국의 해양팽창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아베 독트린을 표명하기도 하였다.³¹⁾

일본은 서태평양에 대한 해양통제권 장악을 추구하는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의 A2/AD 전략의 주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및 유사시 미 본토로부터 전개하는 미 증원부대이지만, 일본 또한 미일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미군과의 공동작전이 가능하고 주일미군 및 미 증원전력의 후방지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부대 및 일본 본토의 각종 지원시설 역시 중국의 A2/AD 전략의 목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³²⁾ 특히, 일본은 중국이 A2/AD 전략을 실행할 군사적 수단으로 보유 또는 개발 중인 대함탄도미사일(ASBM),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전력 및 잠수함 탑재 순항미사일, 특수부대 전력 등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의 ASB가 중국의 A2/AD에 대항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ASB를 완벽히 지원하는 것을 동맹국으로서의 핵심 역할로 규정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³³⁾ 이와 같은 위협인식과 정세판단을 바탕으로 일본은 2013년 12월에 「국가안전보장전략」, 「신방위계획대강」,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동시에 채택하여 새로운 방위정책과 방위력 증강계획을 표명하며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양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30) 『産経新聞』 2014년 1월 14일 ; Shinzo Abe,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a-strategic-alliance-for-japan-and-india-by-shinzo-abe>

31) 『産経新聞』 2014년 5월 30일.

32) 香田洋二, "日本海洋戦略の課題—米中の安全保障政策・戦略と我が国の対応策," 『国際安全保障』 第42巻 第1号(2014년 6월), pp.20-24.

33) 요지 코다, "일본의 해양전략과 동북아 해양안보,"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한국해군의 역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pp.55-56.

2. 일본의 新 해양전략 구상 -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

냉전기부터 탈냉전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일본 해양전략의 핵심은 해상교통로 방어라 할 수 있다. 일본 열도를 기준으로 1,000해리에 이르는 해역의 해상교통로를 방어한다는 기본 개념은 중국의 동·남중국해 및 인도양으로의 해양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해상교통로 방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³⁴⁾ 일본은 중국 해군이 유사시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봉쇄 또는 차단하지 못하도록 해상교통로의 방어 범위와 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³⁵⁾ 이는 기존의 해상교통로 방어 전략이 1,000해리 이내의 해상교통로는 일본이 관할하고 그 외곽은 미국이 관할하는 기존의 미일 간의 역할 분담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해상교통로 방어를 위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과 능력을 강화하여 일본이 주도하는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해상교통로 방어 범위와 능력 확대를 통해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국내 연구에서는 이를 일본의 「역내 해양균형자」 역할 추구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일본의 해양전략을 「해양우세 전략」으로 평가하기도 한다.³⁶⁾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아시아 중시 또는 재균형화(Rebalancing) 전략을 선언하고, 2020년까지 미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계획을 표명하였다.³⁷⁾ 하지만 미국의 대규모 국방예산 삭감(Sequestration)으로 인해 재균형 전략 수행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위축된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일본에게 역내 해양균형자 역할을 강화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중간의 해양패권 경쟁이 중일 간의 경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³⁸⁾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과의 공유된 위협인식을

34) 秋山昌廣, “海洋の安全保障と日本,” 『2010年代の国際政治環境と日本の安全保障—パワースフト下における日本』防衛戦略研究会論文集(2013年5月), pp.12-13.

35) 박영준, “21세기 일본의 해양질서 구상과 해양정책,” 『외교안보연구』 제8권 제1호(2012년), pp.232-233.

36) 김기주(2014), pp.196-201.

37)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http://archive.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검색일:2016년 7월 22일).

38) 김진아,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과 책임전가의 문제,”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서울: 2013), pp.2-7.

토대로 역내 해양균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를 견제하여 해양에서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은 중국에 대한 해군력의 질적 우위를 토대로 해양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획득하여 제한된 기간과 해역에서 해양통제를 달성하는 해양우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⁹⁾

하지만, 일본이 역내 해양균형자 역할 수행을 위한 해양우세 전략을 자국의 새로운 해양전략으로 규정하거나 표명한 적은 없다. 해양우세는 전략적 개념이기보다는 일본이 각종 위협 및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⁴⁰⁾ 오히려 중국에 대한 해양견제를 위한 전략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이다.

일본의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은 가고시마(鹿児島) 남단에서 오키나와(沖縄)를 지나 센카쿠 열도까지 이어져 있는 남서제도(南西諸島)에 대한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해,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 침입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중·일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중국의 A2/AD 전략의 핵심전선인 제1도련(島連)과 일치하는 일본의 남서제도에 대한 방위태세를 강화하여 중국의 A2/AD 전략을 직접 견제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본질은 미국과의 동맹조약이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상자위대는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 서남방에 있는 섬들을 포함하는 해역에서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¹⁾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기본개념은 평소부터 계속적인 정보수집, 경계·감시 등을 통해 도서부에 대한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사전 징후를 획득한 경우에는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전력을 기동 전개 및 집중하여 적의 침공을 저지 및 배제하는 것이며, 사전 징후를 획득하지 못하고 도서를 점령당한 경우에는 함정·항공기를 이용한 대지(對地)사격을 통해 적을 제압한 후, 육상자위대를 상륙시켜 도서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이다.⁴²⁾ 특히 도서방위 및 탈환을 위해서는 해상 및 공중우세의 획득·유지, 그리고 신속하고 충분한 상륙 전력의 투사능력을 필수요건

39) 김기주(2014), pp.200-201.

40) 日本防衛省, 『平成26年版防衛白書』(東京: 防衛省, 2014), pp.180-182.

41) Bernard D. Cole 저, 이춘근 역, 『격량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해양전략』(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14), p.96.

42) 日本防衛省, 『平成26年版防衛白書』, pp.188~189.

으로 한다. 또한 일본은 타격능력의 보유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함정 및 육상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해양우세의 확보 및 도서 탈환 시 적 기지 파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자산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원거리 도서방어 및 탈환을 위한 타격능력의 보유를 위해 일본의 남서제도에 대함미사일을 배치하고, 현재 보유중인 대함·대지미사일의 사정거리 확장 및 탄두효과 개선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⁴³⁾

또한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수행은 해상자위대에게 있어서 대공전, 대잠전, 대수상전, 대기뢰전, 전자전 등 각 작전능력을 모두 투입하는 통합전이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육상·항공 자위대와와의 합동작전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본토로부터 멀리 이격된 해역에서 이러한 작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서에 평시부터 각종 기지 및 유사시 해상거점(Sea Basing)의 설정, 이를 위한 해상 및 공중 수송능력과 호위능력의 강화, 그리고 상륙전 능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⁴⁴⁾

결국 일본의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은 육·해·공 자위대 전력의 통합운용을 통해 해양우세를 확보하여 자국의 해양영역에 대한 침략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지에 실패했을 경우 대지공격과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도서를 탈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기존 전수방위 원칙에 입각한 방어적 전략에서 벗어난 적극적·공세적 해양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2013년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방위력 정비 개념으로서, 기존의 「동적 방위력」 개념에 추가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작전 능력을 강조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⁴⁵⁾ 통합기동방위력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위한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 증강 및 경계·감시능력 강화, 원해작전능력의 확

43) 山崎眞, “島嶼防衛, その戦略と展望,”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년12월), p.75.

44) 위의 글, p.73.

45) 日本防衛省, “平成26年度以降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pp.6~7.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20131217.pdf>(검색일:2016년 7월 23일).

: 신방위대강에서 설명된 동적방위력과 통합기동방위력의 차이는 동적방위력이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지속성 및 다목적성을 갖춘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능력에 기반을 둔 방위력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에 반해, 통합기동방위력은 폭넓은 후방지원 기반의 확립을 염두에 두면서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지휘통신능력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양면에 있어서 즉응성, 지속성, 강인성 및 연접(連接)성을 중시하는 방위력으로 설명되어 있다. 동적방위력의 기동성, 유연성, 다목적성이 통합기동방위력에서 강인성 및 연접성으로 바뀐 것이 차이점이다. 강인성 및 연접성은 방위력의 충분한 양과 질을 확보하고 육해공 통합운용능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沓脱和人·今井和昌, “積極的平和主義と統合機動防衛力への転換,” 『立法と調査』第349号(2014년2월), p.78.

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원거리 도서에 대한 방위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현재 통합기동방위력의 정비를 위한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동중국해에 대한 감시·정찰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시 전용 위성을 신규로 발사하고 고고도(高高度) 무인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가고시마(鹿兒島) 남단에서 오키나와(沖繩)를 지나 대만 근해까지 이어져 있는 남서제도 상의 200여 개의 섬에 중국 해·공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였다. 또한 대만에서 불과 100km 떨어져 있는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与那国)섬에 해상 및 공중 감시를 실시할 정찰대의 창설을 추진하고, 동중국해 섬에 주둔하는 자위대 병력을 향후 5년 동안 현재보다 약 20% 증가한 1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였다.⁴⁶⁾

동시에 통합 기동전력의 증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서제도의 기지에 신형 잠수함, 해상초계기 및 전투기 등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노후화된 수상함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연안 방어용으로 운용하고 신형 수상함들은 남서제도 해역에서 대중국 경계 및 대응전력으로 집중 운용하도록 했다. 또한 신형 해상초계기 P-1을 자체 개발하여 기존의 P-3C를 대체하고 있으며, E-2D 조기경보기의 도입, 신형 소류급 잠수함⁴⁷⁾ 및 차기 이지스 호위함⁴⁸⁾의 건조가 진행 중에 있다.

요컨대,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해양패권 추구, A2/AD에 대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기동방위력의 정비를 적극적

46) 『毎日新聞』 2016年 3月 28日.

47) 일본의 잠수함은 중국 잠수함과 수상함의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잠수함의 보유수를 기존의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노후 잠수함을 순차적으로 최신형 소류급 잠수함으로 교체하고 있다. 특히 수중 배수량이 4,200t인 소류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잠수함 중 규모가 가장 커 533mm 어뢰와 서브 하푼 잠대함 미사일 등의 무기를 탑재하고 공기불요장치(AIP)를 장착해 수중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접근을 거부할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6척이 실전 배치되었고 총 11척의 건조가 계획되어 있다.

48) 일본은 2013 방위대강에서 신형 이지스 호위함 2척을 추가 건조하여, 이지스함의 운용을 기존의 6척에서 8척 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명시하였다. 신형 이지스함 2척에는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Leigh Burke)급 이지스 구축함 Flight II의 최종함에 준하는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건조시부터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SM-3 Block II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여 요격 가능 범위 및 파괴력, 추적 정확도 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제한적이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요격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東郷行紀, “新中期防の新造艦—護衛艦,”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年4月), pp.80-81.

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소극적·방어적인 전수방위의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공세적 방위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IV. 일본의 해상전력 발전 동향 분석

일본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기동방위력 정비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육·해·공 통합 전력의 증강에 연계하여 새로운 개념의 해상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에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첨단 다기능 함정의 확보와 해양투사능력의 강화가 핵심이다.

1. 다기능 컴팩트 함정의 건조

일본은 2013년 신방위계획대강에서 통합기동방위력 정비의 일환으로, “다양한 임무에의 대응능력 향상과 함정의 컴팩트화를 양립시킨 새로운 함정의 건조”를 표명하였다.⁴⁹⁾ 이에 따라 신방위계획대강에서 표명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보유 척수는 2010년 방위계획대강의 48척에서 54척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신형 함정 건조를 중심으로 한 방위력 정비예산도 2010년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23조 4,900억 엔이었던 것이 201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는 24조 6,700억 엔으로 5% 증가하였다.⁵⁰⁾

2013년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건조 추진이 표명된 다기능 컴팩트 함정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작전능력을 복합적으로 갖춘 새로운 개념의 함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갖추고 있는 대잠·대공·대수상전 능력에 더하여 대지공격, 무인기(UAV, UUV) 운용을 통한 경계·감시 능력 등을 고루 갖추고, 특히 종전에 소화함정이 담당해 온 대기뢰전 능력도 구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체의 컴팩트

49) 日本防衛省, “平成26年度以降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p.20.

50) 山崎眞, “新大綱・中期防で海上自衛隊はこうなる,” 『世界の艦船』(東京:海人社, 2014年4月), p.70.

화를 위해 각종 장비를 필요에 따라 취외(取外) 또는 탑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춘 3,000~5,000톤급 규모의 함정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이다.⁵¹⁾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을 위한 다기능 콤팩트 함정의 운용개념은 먼저 무인기 운용을 통해 경계·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갖추어 상륙전 부대에 앞서 대잠 탐색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하며, 적 기지로부터의 유도탄 위협에 대한 대공방어를 수행한다. 또한 대기뢰전 능력을 바탕으로 도서부 해역에 부설된 기뢰원을 제거하여 상륙전 부대의 접근항로를 확보하고, 유도탄 및 함포 등으로 대함전 및 대지사격을 수행하는 것이다.⁵²⁾

이러한 운용개념을 바탕으로 일본이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다기능 콤팩트 함정은 5,000톤급 DD와 3,000톤급 DE이다. 두 함형 모두 노후화된 기존의 DD와 DE를 점진적으로 대체하여 향후 호위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1) 5,000톤급 DD

5,000톤급 DD는 대기뢰전과 탄도미사일 방어를 제외한 호위함에 요구되는 거의 모든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 범용(汎用)호위함으로 건조되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발전추세를 반영하여 대잠·대공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경계감시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강화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다상태(Multi-Static) 및 양상태(Bi-Static) 소나를 탑재한 것이다.⁵³⁾ 다상태 및 양상태 소나는 미 해군이 개발한 미래 대잠전 체계로서 연안 해역과 같이 수중배경소음과 반향음(反響音) 등이 많이 발생하는 복잡한 해양환경에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최신 소나 체계이다. 일본은 미 해군이 최근에 실용화한 다상태 및 양상태 소나 체계를 도입하여 5,000톤급 DD부터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천해역(淺海域)에서

51) 위의 글, p.74.

52) 山崎眞, “島嶼防衛, その戦略と展望,” p.74.

53) 다상태 소나는 자함의 소나에서 송신한 음파를 타함이 수신하거나, 반대로 타함의 소나가 송신한 음파를 자함이 수신할 수 있는 체계이다. 양상태 소나는 자함의 능동소나로 송신한 음파를 자함의 수동소나로 수신할 수 있는 체계이다. 음파의 송수신이 하나의 능동소나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단상태 소나체계에 비해, 다상태 및 양상태 소나체계는 기술적으로 잠수함 탐지거리 및 추적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다수·다종의 대잠센서(타 함정·항공기의 소나 및 소노부이 등)를 네트워크로 통합 운용하여 대잠탐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등 대잠전 수행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의 대잠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도서방위 능력의 강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⁵⁴⁾

또한 잠망경 향해를 하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일본이 자체 개발한 잠망경 탐지레이더를 최초로 탑재하였다. 잠망경 탐지레이더는 P-1 신형 대잠초계기용으로 개발된 X밴드의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함정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레이더의 수평 탐지권이 길고, 잠수함 잠망경과 같은 초소형 표적에 대한 우수한 탐지성능을 보유했다.⁵⁵⁾ 이는 대잠전 능력뿐만 아니라, 소형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등 경계·감시 능력의 강화와도 관련이 깊다.

대공전 능력에 있어서도 일본이 자체 개발한 최신의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 FCS-3A를 탑재하고, ICWI(연속파조사기) 및 개량형 시스패로 미사일(ESSM)을 탑재함으로써 동시대응 가능한 표적수를 증가시키고, 타 함정에 대공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역방공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또한 5,000톤급 DD는 해상자위대 함정 최초로 가스터빈 추진체계에 전기추진 방식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COGLAG : COmbined Gas turbine eLectric And Gas turbine)을 채택함으로써, 연료 소비율을 최소화하여 연료의 재보급 없이 작전 가능한 항속거리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충분한 예비 전력(電力)을 확보하여 추후 신형 무기체계의 추가 탑재·운용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부여하였다.⁵⁶⁾

2) 3,000톤급 DE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기존의 DE는 1990년대 초부터 대량 건조된 2,000톤급의 중·소형 함정으로, 최대속력이 25노트 정도에 작전지속능력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기존의 DE는 지방대에 소속되어 해역경비 및 일본 주변 도서방어, 재난구조 등의 한정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대잠전 및 대공전, 대기뢰전 등의 성분작전은 호위함대 소속의 DDG, DDH, DD급의 함정이 수행하였다.

해상자위대는 능력이 제한적이고 노후화된 기존 DE를 대체할 신형 함정으로 다양한 임무에 대한 대응능력과 선체의 컴팩트화를 양립시킨 다기능 컴팩

54) 世界の艦船編集部, “近未来の海上防衛を担う自衛艦たち,”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6년1월), p.132.

55) 東郷行紀, “新中期防の新造艦—護衛艦,”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년4월), pp.79-80.

56) 위의 글, p.82.

트 함정을 건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① C4ISR 기능(미 해군 및 육상·항공 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 확보), ② 대기뢰전 능력(UUV, USV의 탑재), ③ 대잠탐색 기능(가변심도소나, TASS의 탑재), ④ 대수상 탐색 기능(UAV의 탑재), ⑤ 근접전투 기능(근접 대공·대수상 방어 및 전자전 능력), ⑥ 단독 출입항 기능, ⑦ 고속 스텔스 기능이다.⁵⁷⁾ 이는 지방대에 배치/운용되어 왔던 기존 DE의 운용개념 및 능력과 완전히 다르며,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해역방어뿐만 아니라 원해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함정으로 건조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호위함이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기뢰전 능력을 보유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대기뢰전은 기뢰 위협범위 외곽에서 UUV(Unmanned Underwater Vessel : 무인잠수정)와 USV(Unmanned Surface Vessel : 무인수상정)를 운용하여 수행한다. UUV는 수중항주식 기뢰소해구인 S-10을 자동운용할 수 있는 수중로봇으로서 함에서 이탈시켜 원격 운용이 가능하며, USV는 UUV 근방에 위치하여 수중 데이터 통신을 통해 UUV가 탐지한 기뢰정보를 함으로 중계하면, 함에서는 자항식 기뢰처리용 탄약(EMD)을 원격으로 발사하여 기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3,000톤급 DE의 대기뢰전 능력은 도서방위 및 탈환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USV는 소형일 뿐만 아니라 스텔스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탐되기 어렵기 때문에 도서탈환 작전 시 방어기뢰를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⁸⁾

또한 선체의 컴팩트화를 위해 수직발사대(VLS)를 장착하지 않는 대신, 대함 유도탄방어유도탄(RAM)과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장사정 채프를 탑재하여 자함 방공능력을 강화하고, 4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 능력, 전자전 및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여 대공위협에 대한 생존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특히, 4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이 가능하도록 36메가와트 급의 가스터빈 2기를 탑재하고, 함의 상부구조물을 매우 가벼운 첨단소재인 CFRP로 건조하도록 하였다. CFRP는 전자파 흡수성이 우수하여 RCS의 감소효과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신형 5,000톤급 DD와 동일하게 양상태 또는 다상태 소나 기능을 보유한 신형 VDS(Variable Depth Sonar : 가변심도소나)와 TASS를 탑재할 계획이며, 타 대잠함 및 대잠항공기의 소나체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광역 대잠탐색 및 추적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27mm

57) 東郷行紀, “新中期防の新造艦—護衛艦,” p.82.

58) 世界の艦船編集部, “近未来の海上防衛を担う自衛艦たち,” p.143.

함포에 최대사정거리가 120km에 달하는 신형 유도포탄인 Vulcono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사격능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⁵⁹⁾

2. 해양투사능력의 강화

일본은 자국 영역의 도서에 대해 중국이 침공할 경우, 육·해·공 통합 기동 전력을 이용하여 해상 및 항공 우세를 확보하여 중국의 상륙부대를 해상에서 저지, 퇴거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침공 의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고 기습공격 등으로 도서가 점령당할 경우 도서탈환 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한 상륙 전력의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먼저 도서 탈환을 위한 상륙전 부대로서 수륙기동단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수륙기동단은 육상자위대 서부방면대 보통과(보병)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약 3,000명 규모의 부대로 편성되며, 3개 방면의 사태에 동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3개의 수륙기동연대로 편성된다.⁶⁰⁾ 지금까지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하에 공격형 전력인 상륙전 부대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구현을 위해 해병대와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공격형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륙기동단을 상륙시킬 수단으로서 기존의 CRRC(Combat Rubber Raiding Craft) 및 LCAC (Landing Craft Air Cushion : 공기부양정)에 더하여,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 17대와 신형 수륙양용장갑차 AAV7 5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⁶¹⁾

59) 위의 글, pp.141-142.

60) 수륙기동단은 3개의 수륙기동연대(1개 연대 약 700~900명 규모), 수륙양용차(AAV)부대, 특수부대, 경찰부대, 시설부대, 통신부대, 후방지원부대, 교육부대로 편성된다. 이 중 수륙기동연대는 본부중대, 수륙양용차(AAV) 중대, 헬기강습중대, CRRC(강습정찰용단정)중대로 구성된다. 한편, 일본이 동시대응을 목표로 하는 3개 방면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분쟁 가능성 및 도서의 전략적·지리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센카쿠 열도, 오키나와, 그리고 그 외 일본 류슈 근해의 도서 지역 등으로 추정된다.

61) AAV7은 미국이 해병대용으로 개발한 최신형 수륙양용장갑차이다. 일본은 AAV7 이외에도 파생형인 지휘통제차량 AAVC7과 회수차량 AAVR7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AAV7은 중량 약 22톤, 길이 8.2미터이며, 디젤엔진에 워터제트 추진방식이 적용되어 있다. 속력은 약 70km(해상에서는 약 7노트)이며, 무장으로는 Mk19 자동단총과 12.7mm 기총 등을 탑재하고 있다. AAVC7과 AAVR7은 총탑을 없애고, 각각 무선 지휘통제장치 및 차량회수용 크레인 원치를 탑재하고 있다. 石井幸祐, “島嶼防衛における海陸協同作戦の青写真,”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년12월), p.89.

나아가 일본은 수륙기동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륙 전력을 효과적으로 투사 및 지휘통제하기 위해 우수한 C4I 능력과 항공기 운용능력, 대규모 수송 능력을 갖춘 대형 다기능 함정을 적극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이른바 항모형 DDH로 불리는 휴가급 2척 및 이즈모급 1척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조하여 운용 중이며, 2017년에 이즈모급 2번함이 취역하면, 항모형 DDH는 해상자위대의 주력 기동부대인 4개 호위대군(護衛隊群)의 기함으로서 4척 체제로 운용될 예정이다.⁶²⁾

항모형 DDH로 최초 건조된 휴가급 DDH는 길이 197m, 배수량이 19,000톤에 이르며, 항모형 선체 형상을 채택하고 비행갑판의 강도를 강화하여 최대 11기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수의 대잠헬기를 탑재하여 항공기 중심의 대잠전을 수행하고, 최신형 대잠 센서 및 무장을 장착하는 등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상륙·소해·수송헬기 등 다양한 유형의 헬기를 탑재·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formation / 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호위대군의 지휘통제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육·해·공 합동작전을 위한 해상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⁶³⁾

휴우가급 DDH 2척의 뒤를 이어 건조된 이즈모함은 휴우가급보다 더욱 향상된 능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다. 길이 248m, 배수량이 24,000톤에 이르며, 특히 항공기 운용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최대 14기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고, 대잠헬기를 7기까지 동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서방어 및 탈환, 재해구호활동 등에 운용될 육상자위대의 3.5톤 대형트럭을 50여 대 탑재할 수 있고, 수륙기동단 등 육상자위대 병력의 대규모 수용능력 및 CH-47과 같은 대형 수송헬기의 탑재 능력 또한 갖추었으며, 다른 함정에 대해 연료유 공급(최대 약 3,300KL) 등의 군수지원도 할 수 있는 등 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 지휘통제함으로서의 기능도 변함없이 중시되어 우수한 C4I 및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해·공 자위대 전력에 대한 통합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지휘소도 설치되었다.⁶⁴⁾

62) 山崎眞, “空母型DDH4隻体制と海上自衛隊—その運用構想,”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3년 11월), pp.75-76.

63) 世界の艦船編集部, “最新鋭DDH「ひゅうが」のすべて,”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09년 8월), pp.88-96.

64) 단, 이즈모급 DDH는 헬기 및 차량/병력 등의 탑재/수송능력이 강화된 반면에 자함의 전투능력은 휴우가급 DDH에 비해 감소되었다. 이즈모급 DDH는 어뢰 등의 대잠공격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가급 및 이즈모급 DDH의 4척 체제가 완성되면, 적어도 2개 방면에서 동시에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함정의 수리-교육훈련-작전운용의 주기를 고려하면 상시 2척은 작전 투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3개 방면에서 동시에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하여 일본은 기존의 오오스미급 대형 수송함 3척에 대한 개조에 착수하였다. 오오스미급 대형 수송함은 해상자위대 최초로 항모형 선체형상을 채택하여 1990년 말부터 건조된 함정이다. 길이 178m, 배수량 14,000톤급의 규모로 대형 수송 헬기 2기와 공기부양정 2척, 육상자위대 전차 18대 및 병력 330여 명을 탑재할 수 있다. 오오스미급 수송함에 대한 개조는 향후 도입 예정인 수직이착륙기 MV-22와 신형 수륙양용장갑차 AAV7의 탑재 및 운용능력의 구비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헬기갑판의 강도를 보강하고, AAV7 이송용 승강기 및 함미문 등의 개조를 추진하고 있다.⁶⁵⁾

오오스미급 대형 수송함 3척에 대한 개조가 완료되면 휴가급 및 이즈모급 DDH 4척을 보완하여 동시에 3개 방면에 대한 작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상륙전력의 수송 및 투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휴가급 및 이즈모급 DDH와 패키지 형태로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⁶⁶⁾

나아가 일본은 강습상륙함과 같은 상륙전 기능에 특화된 새로운 대기능 함정의 건조를 구상하고 있다. 2014년 7월 8일,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 당시 일본방위대신은 미국 샌디에고의 미 해군기지에서 강습상륙함 Makin Island LHD-8(Wasp급 8번함)을 시찰한 후, 강습상륙함의 해상자위대 도입과 관련하여 “도서방위를 위해 필요한 부대를 전개할 수 있는 대기능 수송함의 의미로 생각하고자 한다. 신속히 계획에 옮기고 싶다.”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대기능 수송함의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였다.⁶⁷⁾ 그 결과, 2015년

어뢰 위협으로부터 자함을 방어할 수 있는 어뢰대항체계만을 장착하였으며, 휴가급과 달리 중주파 소나 OQQ-23을 장착하여 잠수함 탐지거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공전 능력에 있어서도 FCS-3에서 미사일에 대한 조사기능(Illuminator)을 제외한 시스템인 OPS-50 대공레이더를 장착하였으며, 개량형 시스패로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하지 않고 근접방어 무기체계인 RAM과 Phalanx만을 장착하여 자함방어 능력으로 한정하였다. 즉, 도서 탈환을 위한 기능 및 능력의 강화에 보다 더 집중된 구조로 건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東郷行紀, “新型DDH「いずも」のハードウェアウエポン・システム,”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3년11월), pp.98-99.

65) 小林春彦, “平成26年度概算要求に見る海空自衛隊一対中国島嶼防衛、警戒監視能力の強化,” 『軍事研究』(東京: 2013년11월), p.171.

66) 佐々木俊也, “大型多機能艦に求めるもの,”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6년1월), p.157.

67) 『日本経済新聞』, 2014년7월8일.

도 방위예산에 “수륙양용작전에 있어서 지휘통제 및 항공기 운용능력을 겸비한 다기능 함정의 확보를 검토하기 위한 해외조사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강습상륙함과 같은 대형 다기능함의 확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해상자위대가 검토하고 있는 강습상륙함(LHD) 형태의 대형 다기능함은 상륙단정을 탑재할 수 있는 도크형 상륙함(LSD/LPD), 헬기상륙함(LPH), 상륙지휘함의 기능이 집약되고, 필요에 따라 항공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상륙헬기 부대를 탑재·운용하며, 소규모 사태 발생 시에는 단함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개념의 함정이다.⁶⁸⁾

이와 같은 운용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형 다기능함은 각종 항공기 및 AAV, LCAC 등의 상륙전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상륙 병력·차량·물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보유한, 전장 200m 및 기준배수량 16,000톤 이상의 경함모형 함정으로 건조될 것이다. 또한 항공기를 이용한 신속한 인원·물자의 상륙과 LCAC을 이용한 주력 전차 등의 동시 상륙이 가능하도록 Well dock과 항공기 격납고, LCAC 갑판을 모두 갖춘 구조가 될 것이며, 현재 개발 중인 신형 공기부양정(LCAC)도 2척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⁹⁾

또한 대형 다기능함은 C4ISR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대형 다기능함이 지휘통제함으로써 운용될 도서 탈환 작전은 대규모 합동작전으로 전개됨을 고려하여, 육·해·공 자위대 전력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호 호환성을 갖춘 지휘통신체계를 탑재하도록 하였으며, CRRC 및 AAV, 항공기 등 각종 상륙전력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위성 및 무선통신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육상자위대가 보유중인 무인정찰기(UAV)를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장 감시·정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무인정찰기에 무선 중계시스템을 장착하여 함정에서 발진한 CRRC 및 AAV, LCAC 등의 상륙전력 간에 영상 및 문자 정보를 지리적 제약 없이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장 정보공유체계의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⁷⁰⁾

나아가, 대형 다기능함을 건조하면 향후 40년 가까이 운용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장래에 도입하게 될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구조로 건조하는 것도 구상되고 있다. 즉,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68) 佐々木俊也(2016), p.157.

69) 山崎眞, “どうなる? 近未来の自衛艦—26中期防以降の推移,”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6年1月), p.124.

70) 佐々木俊也(2016), p.158.

있는 MV-22뿐만 아니라, 장래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VTOL기(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수직이착륙기) 및 STOVL기(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단거리 이륙·수직 착륙) 등도 탑재·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⁷¹⁾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패권 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양전략으로서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향후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 전력으로서 5,000톤급 DD 및 3,000톤급 DE를 중심으로 한 다기능 콤팩트 함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해가고 있다. 동시에 상륙전력을 확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투사 및 지휘통제 할 수 있는 대형 다기능 함정의 확보를 추진하는 등 해양투사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중국을 비롯한 자국에 대한 위협요인에 대해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중국과 비교하여 첨단 해상전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군사적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상황은 중국 대 일본의 역내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역내 군비경쟁 또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새로운 해양전략 구상과 해군력 강화, 그리고 중·일 간의 역내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의 심화는 우리의 해양안보와 해군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역내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일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일본 또는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해양주도권의

71) 위의 글, pp.158-159.

확보를 견제 및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해군력은 지난 20여 년간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과 비교할 경우 양적·질적으로 모두 열세에 있으며 성장 속도도 더딤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해군력이 일본,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증강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일본 및 중국의 해군력과 기능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해작전이 가능한 기동함대와 대규모 해양투사능력을 갖춘 한국형 항모감성단의 건설 등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해군력 증강을 통해서 중국 또는 일본의 해양주도권 확보를 견제 및 억제하고, 우리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의 공세적 전략으로의 전환과 해양투사능력의 강화는 독도 영유권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새로운 군사적 위협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강화된 해양투사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유사시 독도 침탈을 위해 해양투사능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해양투사능력 강화가 지니는 함의를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이 독도에 대해 해양투사능력을 사용할 의도를 억지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방어 전력을 확충해 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우리 해군 전력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전력 발전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자위대가 건조하고 있는 다기능 콤팩트 함정은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와 새로운 함정 건조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해양투사능력 강화를 위해 건조되고 있는 대형 다기능 함정 역시 각종 신형 상륙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 및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함정 건조개념과 기술, 첨단 C4I 체계 등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전력의 높은 질적 수준과 첨단화된 성능이야말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일관될 해상자위대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해상전력의 질적 향상과 주변국 해군력과의 기능적 균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본의 해상전력 발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첨단 무기체계 및 함정 건조 기술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해상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주, “일본의 해양전략 평가와 전망,”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 김진아,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과 책임전가의 문제,”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서울: 2013)
- 김태준,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력분석,” 『STRATEGY 21』Vol.4, No.1(2001 Summer)
- 류재학·배준형,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키워드로 이해하는 세계 최정상 해군력, 해상자위대의 실체』(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년)
- 박남태, “일본의 해양전략-제국해군에서 해상자위대로,” 임경한 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경쟁과 협력의 딜레마』(서울: 북코리아, 2015)
- 박영준, “21세기 일본의 해양질서 구상과 해양정책,” 『외교안보연구』 제8권 제1호 (2012년)
- Bernard D. Cole, 이춘근 역, 『격랑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해양전략』(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14)
-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서울: 나남출판, 2006년)
- 배정호, “일본의 안보전략과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 『21세기 해양갈등과 한국의 해양전략』(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년)
- 송영선,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 : 추세와 전망,” 이홍표 편, 『일본의 해양전략과 21세기 동북아 안보』(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 오순근, “중국의 해양전략-대륙국가에서 해양강국으로,” 임경한 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경쟁과 협력의 딜레마』(서울: 북코리아, 2015.)
- 요지 코다, “일본의 해양전략과 동북아 해양안보,”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한국해군의 역할』(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이춘근, “일본 해군력 발전의 역사적 궤적,” 이홍균 편, 『日本の 해양전략과 21세기 동북아 안보』(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 이홍표, “21세기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 : 추세와 전망,” 『STRATEGY 21』 Vol.21, No.1(2008 Summer)
- 임경한, “미국의 해양전략: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임경한 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경쟁과 협력의 딜레마』 (서울: 북코리아, 2015.)
- 정삼만,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발전,”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 한국국제문제연구원 편, “일본 집단자위권 : 해외 무력행사 가능,” 『국제문제』 제542호(2015년 10월)
- 한준희·이정근, “일본의 방위정책 및 해상자위대 전력변화와 한국 해군의 발전방향,”

『해양전략』 제164호(2014년 12월)

Air-Sea Battle Office, “Air-Sea Battle: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 Area Denial Challenges,” <http://defense.gov/pubs/ASB-ConceptImplementati on-Summary-May-20 13.pdf>

Euan Graham, 『Japan’s Sea Lane Security, 1940-2004』(New York: ROUTLEDGE, 2006)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http://archive.defense.gov/news/ 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February 2010),” http://www.defense.gov/Portals/1/features/defenseReviews/QDR/QDR_as_of_29 JAN10 _1600.pdf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http://archive.de fense.gov/pubs/2014_Quadrennial_Defense_Review.pdf

秋山昌廣, “海洋の安全保障と日本,” 『2010年代の国際政治環境と日本の安全保障—パワースhift下における日本』防衛戦略研究会論文集(2013年5月)

朝雲新聞社 編, 『防衛ハンドブック(平成20年版)』(東京:朝雲新聞社, 2008年)

五百旗頭真 編, 『戦後日本外交史』(東京: 有斐閣アルマ, 1999年)

石井幸祐, “島嶼防衛における海陸協同作戦の青写真,”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年12月)

栗田昌之, 『基盤的防衛力構想の策定とその意義 : 1970年代の防衛行政における政策と戦略』, 法政大学公共政策研究科論文(2016年)

香田洋二, “日本海洋戦略の課題—米中の安全保障政策・戦略と我が国の対応策,” 『国際安全保障』第42巻 第1号(2014年 6月)

小林春彦, “平成26年度概算要求に見る海空自衛隊—対中国島嶼防衛、警戒監視能力の強化,” 『軍事研究』(東京: 2013年11月)

杏脱和人・今井和昌, “積極的平和主義と統合機動防衛力への転換,” 『立法と調査』 第349号(2014年2月)

佐々木俊也, “大型多機能艦に求めるもの,”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6年1月)

世界の艦船編集部, “近未来の海上防衛を担う自衛艦たち,”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6年1月)

世界の艦船編集部, “最新鋭DDH「ひゅうが」のすべて,”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09年8月)

東郷行紀, “新型DDH「いずも」のハードウェア—ウエポン・システム,”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3年11月)

- 東郷行紀, “新中期防の新造艦—護衛艦,”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年4月)
- 真田尚剛, “新防衛力整備計画の再考—策定過程における防衛力整備の方向性を中心に,” 『国際安全保障』第42巻 第1号(2014年 6月)
- 山崎眞, “海上自衛隊自衛艦隊の大改編,” 『世界の艦船』(東京: 2008年6月)
- 山崎眞, “空母型DDH4隻体制と海上自衛隊—その運用構想,”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3年11月)
- 山崎眞, “新大綱・中期防で海上自衛隊はこうなる,”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年4月)
- 山崎眞, “島嶼防衛、その戦略と展望,”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4年12月)
- 山崎眞, “どうなる? 近未来の自衛艦—26中期防以降の推移,” 『世界の艦船』(東京: 海人社, 2016年1月)
- _____, 『東アジア戦略概観2002』(東京: 日本防衛庁防衛研究所, 2003年3月)
- 日本外務省, “日米安全保障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ての同盟(1996年4月17日),” <http://www.mofa.go.jp/mofaj/area/usa/hosho/sengen.html>
- 日本外務省,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1997年9月23日),” <http://www.mofa.go.jp/mofaj/area/usa/hosho/kyoryoku.html>
- 日本防衛省, “国防の基本方針(昭和32年5月20日),” <http://www.mod.go.jp/j/publication/wp/wp2013/pc/2013/html/ns006000.html>
- 日本防衛省, “新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ガイドライン)(2015年4月27日)” <http://www.mod.go.jp/j/publication/kohoshiryo/pamphlet/pdf/shishin.pdf>
- 日本防衛省,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17年度~平成21年度)について(2004年12月10日),”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05/chuuki.html>
- 日本防衛省, “平成17年度以降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04年12月10日),”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05/taikou.html>
- 日本防衛省, “平成26年度以降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20131217.pdf>
- 日本防衛省, 『平成26年版防衛白書』(東京: 防衛省, 2014)
- 日本防衛庁, “平成8年版防衛白書—新たな時代への対応,”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1996/index.html
- 『産経新聞』 2014年 1月 14日
- 『産経新聞』 2014年 5月 30日
- 『毎日新聞』 2016年 3月 28日
- 『日本経済新聞』 2014年 7月 8日

Abstract

**The analysis on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its Naval Forces
- focusing on Japan's countermeasure to China's
pursuing of maritime hegemony -**

Bae Joon-Hyung*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three guidelines of its security polic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and Midterm Defense Buildup Plan, exceptionally at one time. This means Japan has been seeking the new strategy an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nsidering changing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Japan revised the security laws for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authorized the use of force even when Japan is not under attack. Also, Japan renewed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in twenty years, and has expanded JSDF's scope of activity to a worldwide level. These changes imply Japan would constantly seek to build military forces focusing on naval forces. Because Japan's naval forces, the JMSDF is the means that allow Japan to use its force at anywhere overseas and expand its roles and miss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by the basis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is research will analyze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trend of force development and eventually look for the implication on our maritime security

These days, Japan has perceived Chinese rapid increase of naval power and pursuing of maritime hegemony as a grave threat. In response to this, Japan is designing new maritime strategy, which are "remote islands defense and

* Lieutenant Commander, Republic of Korea Navy, Command Republic of Korea Fleet.

recapture” and proactively develop a new type of naval forces to accomplish this new strategy.

The Japan’s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is to harden its defensive posture in Nansei islands which correspond to China’s 1st island chain for chinese A2/AD strategy and directly encounter with China and to protect its own dominium and maritime interest while supporting US national strategy in East Asia.

Japan continues to build compact, multi-functional ship to accomplish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and keep strengthening its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y to include build of new amphibious ship, and large, multi-functional ship which can provide effective C2.

These changes imply that Japan is shifting its strategy from passive and defensive to proactive and aggressive way and continues to pursue naval buildup. The implication of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naval buildup needs to be observed carefully and we need to keep developing naval power required to protect our maritime sovereignty and interest.

Key Word : Japan’s Maritime Strategy, Remote Islands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Multi-functional and Compact Ship,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y